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김 연 희** · 백 학 영***

◀ 요약 ▶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을 확장하기 위한 개입과 장려금 형태의 경제적 유인 요소들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들-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고등교육, 취업장려금-이 취업과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직업훈련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자격증 취득은 취업과 소득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려금은 취업과 탈수급과 긴밀한 관계를 보였는데 소득증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고등교육은 소득이나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투입된 시간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창출의 기회가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취업경쟁력에 긍정적 효과가 없어서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경제적응지원에 대한 제안점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경제적응, 정착지원정책

* 본 연구는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2011. 10. 28, 전북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제1저자(yeunheekim@daegu.ac.kr)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hywhite@paran.com)

1. 서론

1) 문제 제기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특히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있어 왔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별한 정치·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겠지만, 이주민 정착지원정책은 새로이 정착하는 이주민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둔다(Potoky-Tripodi, 2004:60)는 점에서도 이들의 경제적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중심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각적인 정부정책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지원하는 많은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지표들에 미루어 이들의 경제적 지위가 그리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연희, 백학영, 2010; 김연희, 조영아, 유시은, 2009;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고혜원, 2008; 이기영, 2006). 예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소득수준, 빈곤율, 수급 의존도, 경제활동의 형태 등 지표들은 좋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다수 있다(김선화, 2011; 김화순, 유길상, 2010; 김연희 외, 2009; 유시은, 2009; 윤덕룡, 2007; 윤인진, 2007). 이들 연구들이 도출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이 취업과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존의 국내외의 고용관련 연구 결과나 직관적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의 이유를 편의표집의 문제, 작은 표본의 규모가 주는 한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정책집행 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일반적 실태를 파악한 다거나 이들의 경제적 적응의 영향요인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시행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가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유의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중심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으로서 각종 정착장려금이 취업과 소득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05년도에 개정되어 지난 6년간 시행되어 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재정적 유인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착지원정책이 시행되었고 초기 정착민이 다양한 교육과 재정지원을 누릴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원 정책이 취업과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김선화(2011)가 유일하다. 김선화(2011)는 2005년에 입국하여 개정된 정착지원정책의 첫 수혜대상자이며, 정착지원 수혜기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착장려금 제도가 이들의 현재 취업여부와 취업기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통일부의 3S-Net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첫 시도이며, 2005년 입국자 전수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기에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갖는 편의표집의 제한점을 뛰어 넘었다는 점과 정착장려금 지급과 취업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각각 정착장려금의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하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주민의 경제적응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정착기간이 미치는 영향, 가족 내의 위치와 같은 인적 특성의 영향, 지역사회 서비스자원이 미치는 영향, 거주 지역 특성의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없었고, 2차 자료를 이용하였기에 정착장려금제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없었다는 중요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취업, 소득수준, 근로시간, 소득활동 경험-에 미친 성과의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첫 시도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영향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사용한 데이터가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로서 조사대상이 편의 표집되었기에 엄밀

한 기준에서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전체 모수의 5%가 참여하였고, 모수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층화추출 방식으로 표집하여 모수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편의추출의 한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2.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추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2005년 개정된 정착지원 사업법은 2006년 7월과 2009년 7월 정착지원법 개정을 거치며 일방적 ‘수혜적 보호’ 정착지원에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자립·자활’ 중심의 정착지원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큰 근간이 되는 개정 내용은 정착지원금의 기본금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에 장려금 제도를 폭 넓게 도입하여 자립·자활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려는 개인의 행동에 재정적 유인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였다.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과 연계된 정착장려금으로는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이 있다. 개정된 정착지원법에서 정책의 의도는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업 후에는 직장을 유지하여 고용의 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득의 상승을 유도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내 용	정착지원 법 근거
시설보호 및 사회적응 지원	시설보호	남한 입국 후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제11조
	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교육(12주) :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 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제15조
	초기정착 지원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전입	제11조
교육지원	학력인정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통일부 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력인정 여부 결정	제13조
	자격인정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 인정,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 제출,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정하는 기관(민간기관 포함)의 장은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결정	제14조
	특례 편입학	대학 특례 입학	제24조1
	학비 지원	중·고·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보조	제24조2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600만 원 지급	
정착금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최대 200만 원, 1년 과정 우선선정 직종 추가 장려금 200만 원	제21조
		자격취득 장려금 1회 200만 원	
		취업 장려금 최대 650만 원	
		지방거주 장려금 최대 260만 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 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최소 15만 원 지급	제17조
	고용지원금	급여의 1/2(50~70만 원 한도)을 최대 3년 지급	
	취업보호 담당관	전국55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 및 알선	
	기타	취업 보호,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주거	주택 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제20조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	
사회복지	생계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제26조
	의료 보호	의료급여 1종	제25조
	연금 특례	50-60세 국민연금 가입특례	제26조2
거주지 보호	정착도우미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정착지원(전국 2,000여 명)	제22조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200여 명), 취업보호담당관(55명), 신변보호담당관(800여 명)	제22조
	지역적응지원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제공	제15조2

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하였다. 예로, 하나원 내에서부터 경제 교육, 진로지도 및 기초 직업적응 훈련 및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을 대비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30개의 하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사회적응교육과 직업적응훈련을 강화해 우리사회 적응력과 안정적 정착(자립·자활 능력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 제도로는 무료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취업 알선 및 직업지도를 하고 있다. 현행 정착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요소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동력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재정적 유인책도 포함하였다. 또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을 한국 내에서 상응하는 학력과 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고용시장에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노력도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전입 후 1년 간 하나센터가 공식적 사회적지지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의 통합을 지원하는 지역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2) 경제적응에 미치는 인적자본의 영향

인적자본이란 개인의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개인의 선천적 역량과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총합이라고 정의된다(Mincer, 1995). 개인의 지능과 같은 내재적이고 선천적 능력은 개인의 경제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정규교육, 직업 훈련, 취업 경험, 자격증 등이 경제적응의 예측요인으로 자주 설정된다(Mincer, 1995; 김선화, 2011; 김화순, 유길상, 2010; 김연희 외, 2009). 지금까지 인적자본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남북한에서의 교육이 취업이나 소득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김선화, 2011; 김화순, 유길상, 2010; 윤인진, 2007; 김창권, 2007),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 남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윤덕룡, 2007; 김창권, 2007). 북한이탈주민의 경

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착지원의 효과에 대한 결과도 일관되지 않다.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나 소득 또는 고용안정성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김선화, 2011; 김화순 외, 2010; 박성재, 김화순, 2008; 김창권, 2007),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김연희, 백학영,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유시은, 2009).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이 이들의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충되는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안정적인 직장경험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 장려금, 학비지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엄밀한 정책의 비용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데, 그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들의 산출물인 남한에서 획득한 학력, 직업훈련수료,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수령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정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이주자의 경제적응

이주자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주자의 경제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인적자본 수준, 거주기간, 가구원 수, 정착지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응 수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lack, 2007; Potoky-Tripodi, 2004; Akresh, 2007; Hum & Simpson, 2004). 언어와 문화적 차이, 정착지에서 이주자의 자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의 불인정 등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 등은 취업에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를 진입효과(entry effect)라고 한다(Hum & Simpson, 2004). 진입효과로 인해 이주과정에서 이주자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과정은 U자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주 전의 지위와 비교하여 이주 초기에 직업과 소득의 하락을 경험하고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과 직업 지위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Ferrie, 1996; Chiswick, Lee & Miller, 2003; Rooth & Ekberg, 2006). 새로운 정착지와 이주자의 출신국 간에 문화적 차이가 적

고, 교육의 이전가능성이 높거나, 본국에서 가졌던 경제적 지위가 별로 높지 않을 때에 얇은 U자 형태의 적응궤적을 보인다고 한다(Chiswick et al., 2003; Rooth et al., 2006). 그런가 하면 본국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았을수록, 본국에서 취득한 교육과 기술의 이전 가능성이 적어 정착지에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수록 가파른 U자 형태의 회복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증을 남한에서 상응하는 학력과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은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고등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하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북한 내의 경제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교육이나 취업 경험 이 많지 않으며, 제 3국에서 이동이나 거주기간 중에 합법적인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의 인적자본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고 남한의 산업 경제구조로 이전 가능한 교육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이 대략 6-18개월¹⁾ 안에 취득할 수 있는 직업기술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과 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4대 보험 직종에 진입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을 포기하게 하려면 좀 더 양질의 직업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주자의 정착기간이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정착기간이 이들의 경제적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착기간이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김연희 외, 2009; 박상인, 김태중, 2005; 김창권, 2007; 윤덕룡, 2007), 정착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김화순 외, 2010; 노대균, 2001). 김화순 외(2010)는 정착기간보다는 취업기간이 취업안정성과 소득을 더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¹⁾ 정착지원법에 따르면 최대 3회까지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우선선정직종은 1년간의 직업훈련 기간이지만 대부분 3~6개월 과정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4)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

북한이탈주민만큼 경제적 지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빈곤층일 것이다. 남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취업이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직업훈련 후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남재량, 2004; 오영훈, 2005, 2006; 전재식, 2008), 참여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훈, 2006; 김주섭 외, 2006; 전재식, 2008). 또 직업훈련분야와 일자리가 일치할수록, 전일제 임금 근로자일 경우에, 직업훈련이 임금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섭 외, 2006). 업종으로는 건설, 기계장비, 전기전자 분야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에 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빈곤층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를 위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인적자본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직업훈련이 취업이나 임금상승과 같이 경제적 지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중에서 남성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력이 높은 개인에게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빈곤층보다는 일반인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취업 경험이 없는 개인보다는 취업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재식, 2008; 오영훈, 2005, 2006; 채창균, 김미란, 2005).

직업훈련 참여 여부, 직업훈련의 질(기간, 수준)과 강도가 취업에 효과가 있으며(오영훈, 2006; 전재식, 2008), 그 영향의 크기는 취약계층보다는 일반인에게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 훈련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전재식, 2008)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진입에는 도움을 주지만 소득 수준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직업훈련 수료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유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박성재 외, 2008; 김화순 외, 2010, 김선화, 2011)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직업훈련과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경우 단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효과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김연희 외, 2010).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정착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일부의 연구위탁사업으로 2009년 10월~11월에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은 2009년 5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지역사회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 637명을 임의층화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분석대상을 만 15~64세로 한정하였으며, 분석에는 55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정착지원제도의 성과 분석을 위해선 본 연구는 기술적인 통계를 통해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에 따른 개인 가구특성 차이, 정착지원제도 경험 차이, 정착지원제도와 경제적 적응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χ^2 검증), 평균비교(t 검증, F 검증)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인 경우(취업여부, 기초생활보장여부, 단시간근로여부, 소득활동경험여부)에는 로지스틱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근로소득)에는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근로소득이 종속변수인 선형회귀분석 모형에서 근로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개념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상태이다.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경험, 취업 여부나 취업경로, 근무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로 경제적 적응을 측정하고 있다(오봉욱 외, 2010; 윤인진, 2007).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경제적인 안녕 상태는 노동과 소득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적응은 취업상태와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경제적인 안녕과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소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태는 미취업(실업과 비경제활동)과 취업(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경제적 적응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수급과 비수급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상태에 따른 경제적 적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미취업자의 남한에서의 소득활동경험을 측정하였다.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을 단시간근로로 정의하였으며, 근로소득은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고, 미취업자의 소득활동경험은 남한사회 정착 이후의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2) 설명변수의 정의 및 측정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특성으로 성, 연령, 남한학력, 혼인상태, 가구 내 위치, 거주 지역, 정착기간을 투입하였다.²⁾ 성은 남녀로, 연령은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54세), 중고령층(55~64세) 구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남한에서의 학력을 투입하였으며(없음,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혼인상태는 미혼, 유배우, 무배우(배우자 북한거주 포함)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구 내 위치는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거주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정착기간은 조사시점인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남한사회거주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위해서는 남한사회에서 취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³⁾ 이에 본 연구에

²⁾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학력이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북한학력을 모형에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에 북한학력 정보가 없어 투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는 정착지원제도 중에서 직업훈련, 자격증, 구직지원(구직등록 및 일자리 알선), 장려금 지원(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장려금), 지역사회 서비스지원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에서 남성은 29.5%, 여성은 70.5%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65.7%로 여성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⁴⁾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35.2세이며, 30대 37.1%, 40대 25.8%, 20대 20.6%, 10대 8.1%, 50대 6.8%, 60대 1.6% 순이다. 이들의 남한에서의 학력은 남한 학력이 없다는 비율이 76.6%로 전체의 약 2/3가 남한에서의 학력이 없었으며, 14.1%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 학력은 5.5%, 중학교 학력은 3.8%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35.4%(북한에서 결혼한 배우자 16.1%, 남한에서 결혼한 배우자 19.3%)였으며, 북한에서 결혼하여 북한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8%이고, 미혼은 34.0%, 무배우자(이혼, 별거, 사별)는 24.8%이다. 분석대상의 72.1%는 가구주이고 가구주 배우자는 13.6%, 기타가구원은 14.3%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8.3%로 많다. 남한에서 정착한 기간은 평균 47.3개월(약 4년)로, 1~2년이 22.5%, 2~3년이 19.5%, 3~5년이 25.3%, 5~7년이 20.9%, 7년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이었으며, 1명 29.9%, 2명 32.2%, 3명 26.8%, 4명 8.6%, 5명 이상 2.5%였다. 가구의 소득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과반수가 넘는 52.1%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100~200만 원은 32.7%였으며, 300만 원 이상은 15.2%에 불과하였다.

³⁾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와 지원은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주요하게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사회복지급여 제공, 교육, 정착도우미 등이 있다.

⁴⁾ 2011년 3월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918명이며, 이 중 여성 비율은 66.9%이다(통일부, 2011).

[표 2] 개인 일반 및 가구 특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	남성	165	29.5	지역	비수도권	177	31.7
	여성	394	70.5		수도권	382	68.3
	계	559	100.0		계	559	100.0
연령	10대	45	8.1	남한 정착 기간	1~2년 미만	126	22.5
	20대	115	20.6		2~3년 미만	109	19.5
	30대	208	37.1		3~5년 미만	141	25.3
	40대	144	25.8		5~7년 미만	117	20.9
	50대	38	6.8		7년 이상	66	11.8
	60대	9	1.6		계	559	100.0
	계	559	100.0		평균	47.3개월	
	평균	35.2세			1명	167	29.9
남한 학력	없음	428	76.6	가구원 수	2명	180	32.2
	중등	21	3.8		3명	150	26.8
	고등	31	5.5		4명	48	8.6
	대학	79	14.1		5명 이상	14	2.5
	계	559	100.0		계	559	100.0
	평균				평균	2.2명	
현재 혼인 상태	미혼	188	34.0	가구 소득	없음	4	0.7
	북한배우자동거*	89	16.1		50만 원 미만	102	18.5
	남한배우자동거*	107	19.3		50-100만 원 미만	181	32.9
	북한배우자비동거**	32	5.8		100-150만 원 미만	125	22.6
	이혼별거	93	16.8		150-200만 원 미만	56	10.1
	사별	44	8.0		200-300만 원 미만	52	9.4
	계	553	100.0		300-400만 원 미만	18	3.3
가구 내 위치	가구주	403	72.1	400-600만 원 미만	11	2.0	
	가구주배우자	76	13.6	600만 원 이상	3	0.5	
	기타가구원	80	14.3	계	552	100.0	
	계	559	100.0				

* 북한에서 결혼하여 그 배우자와 동거, 남한에서 결혼하여 그 배우자와 동거 ** 북한에서 결혼하여 배우자 북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지원 경험을 보면, 전체의 37.7%가 직업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훈련 참여자 중 47.4%만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38.3%로 많지 않았다.

⁵⁾ 599명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비율은 62.3%이며,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비율

직업훈련 장려금은 23.4%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 장려금을 받은 비율은 7.3%에 불과하였다. 구직등록을 한 경우는 22.7%이며, 구직등록 후 일자리 알선을 받은 비율은 52.0%였다.⁶⁾ 지역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은 비율은 27.2%였다.

[표 3] 정착지원 경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업훈련	없음	348	62.3	취업 장려금	없음	518	92.7
	있음	211	37.7		있음	41	7.3
직업훈련 후 자격증	없음	111	52.6	구직등록	없음	432	77.3
	있음	100	47.4		있음	127	22.7
직업훈련 장려금	없음	428	76.6	일자리 알선	없음	61	48.0
	있음	131	23.4		있음	66	52.0
한국 자격증	없음	345	61.7	지역사회 지원	없음	407	72.8
	있음	214	38.3		있음	152	27.2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취업자가 42.0%, 미취업자 58.0%(실업자 6.3%, 비경제활동인구 51.7%)로 미취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⁷⁾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은 눈에 띄는 현상인데, 이들의 36.7%는 심신장애가 있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사나 육아로 인한 비율은 21.5%, 정규교육이나 취업준비인 경우는 36.3%(정규교육 및 관련 준비 29.4%, 취업준비 및 취업교육 6.9%)이다. 과반수가 넘는 51.2%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는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평균 48.5시간이었으며, 이 중 19.1%는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였다. 취업자의 근로소득⁸⁾은 평균 127.6만원이었

은 19.9%,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17.9%이다.

⁶⁾ 599명을 기준으로 구직등록 경험이 없는 비율은 77.3%였으며, 구직등록만 한 비율은 10.9%, 구직등록 후 일자리 알선까지 받은 비율은 11.8%이다.

⁷⁾ 2009년 남한 주민 중 취업자는 64.0%, 실업자 1.6%, 비경제활동인구 34.4%로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자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

⁸⁾ 취업자 230명 중 1명은 월소득에 5,000만 원으로 응답하여, 근로소득의 평균을 심각하게 높이는 경향이 있어 근로소득 관련 분석에서 이 사례는 제외하였다.

으며, 임금근로자의 약 1/3은 10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100~200만원은 55.5%, 200~300만 원은 8.3%, 300만 원 이상은 5.6%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자의 남한에서의 소득활동 경험을 보면, 43.2%가 소득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4.6%는 1년 이상, 22.2%는 1년 미만의 소득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경제적 적응 특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235	42.0	근로 소득	100-150만 원 미만	98	42.8
	실업자	35	6.3		150-200만 원 미만	29	12.7
	비경제활동	289	51.7		200-300만 원 미만	19	8.3
	계	559	100.0		300-400만 원 미만	8	3.5
기초 보장	수급	286	51.2		400-500만 원 미만	1	0.4
	비수급	273	48.8		500만 원 이상	4	1.7
	계	559	100.0		계	229	100.0
근로 시간	36시간 이상	186	80.9		평균	127.6만원	
	36시간 미만	44	19.1		1년 미만	72	22.2
	계	230	100.0		1년 이상	112	34.6
	평균	48.5시간		없음	140	43.2	
근로 소득	50만원 미만	28	12.2	계	324	100.0	
	50-100만원 미만	42	18.3	-	-	-	

2) 정착기간에 따른 특성 비교

이민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국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경력을 쌓게 되어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Yoon, 1997; 윤인진 2007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에 따라 개인 및 가구특성, 정착지원 경험, 경제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전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기간에 따라 경제적 적응 정도는 다를 것이며, 정

착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적응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1) 개인 및 가구특성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기간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 개인 일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인 일반특성 중 성, 남한학력, 지역은 정착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을 보면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다.⁹⁾ 다음으로 남한학력을 보면,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에서의 학력이 증가하는 반면, 남한학력 없음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대학교 졸업(재학 등 포함)의 비중은 2년 미만 7.9%, 2~3년 미만 8.3%, 3~5년 미만 14.2%, 5~7년 미만 22.2%, 7년 이상 21.2%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수준이 높은 남한사회에¹⁰⁾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대학교육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31.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2년 미만(39.7%)과 5~7년(41.0%) 정착자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는 지자체의 주택지원과 관련이 깊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층은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며, 남한에서 혼인한 유배우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¹¹⁾

⁹⁾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보호결정 기준) 중 여성 비율은 보면, 98년 이전까지 12%, 2002는 56%, 2006년 75%, 2010년 76%로 여성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일부 공식 발표 자료).

¹⁰⁾ 우리나라 대학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비율, 재수생 미포함)은 2008년 83.8%까지 증가하였으며, 2009년 81.9%, 2010년 79.0%이다(2010년 교육통계연보).

¹¹⁾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배우자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한 배우자의 비율이 증가하는(2년 미만 6.5%, 2~3년 미만 13.9%, 3~5년 22.5%, 5~7년 23.9%, 7년 이상 37.9%) 경향을 보인다.

[표 5] 정착기간에 따른 개인 특성 비교

		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계	x^2
성	남성	25 (19.8)	22 (20.2)	45 (31.9)	38 (32.5)	35 (53.0)	165 (29.5)	28.657** *
	여성	101 (80.2)	87 (79.8)	96 (68.1)	79 (67.5)	31 (47.0)	394 (70.5)	
	계	126 (100.0)	109 (100.0)	141 (100.0)	117 (100.0)	66 (100.0)	559 (100.0)	
연령1)	청년층	42 (33.3)	34 (31.2)	38 (27.0)	32 (27.4)	14 (21.2)	160 (28.6)	15.170
	중장년층	81 (64.3)	74 (67.9)	99 (70.2)	79 (67.5)	45 (68.2)	378 (67.6)	
	중고령층	3 (2.4)	1 (0.9)	4 (2.8)	6 (5.1)	7 (10.6)	21 (3.8)	
	계	126 (100.0)	109 (100.0)	141 (100.0)	117 (100.0)	66 (100.0)	559 (100.0)	
남한 학력	없음	101 (80.2)	88 (80.7)	112 (79.4)	82 (70.1)	45 (68.2)	428 (76.6)	24.773*
	중등	3 (2.4)	7 (6.4)	3 (2.1)	5 (4.3)	3 (4.5)	21 (3.8)	
	고등	12 (9.5)	5 (4.6)	6 (4.3)	4 (3.4)	4 (6.1)	31 (5.5)	
	대학	10 (7.9)	9 (8.3)	20 (14.2)	26 (22.2)	14 (21.2)	79 (14.1)	
	계	126 (100.0)	109 (100.0)	141 (100.0)	117 (100.0)	66 (100.0)	559 (100.0)	
혼인 상태	미혼	48 (38.7)	41 (38.0)	44 (31.9)	39 (33.3)	16 (24.2)	188 (34.0)	13.363
	유배우	33 (26.6)	37 (34.3)	48 (34.8)	44 (37.6)	34 (51.5)	196 (35.4)	
	무배우2)	43 (34.7)	30 (27.8)	46 (33.3)	34 (29.1)	16 (24.2)	169 (30.6)	
	계	124 (100.0)	108 (100.0)	138 (100.0)	117 (100.0)	66 (100.0)	553 (100.0)	
가구 내 위치	가구주	90 (71.4)	77 (70.6)	105 (74.5)	83 (70.9)	48 (72.7)	403 (72.1)	5.879
	가구주배우 자	14 (11.1)	15 (13.8)	17 (12.1)	22 (18.8)	8 (12.1)	76 (13.6)	
	기타	22 (17.5)	17 (15.6)	19 (13.5)	12 (10.3)	10 (15.2)	80 (14.3)	
	계	126 (100.0)	109 (100.0)	141 (100.0)	117 (100.0)	66 (100.0)	559 (100.0)	
지역	비수도권	76 (60.3)	84 (77.1)	107 (75.9)	69 (59.0)	46 (69.7)	382 (68.3)	16.092**
	수도권	50 (39.7)	25 (22.9)	34 (24.1)	48 (41.0)	20 (30.3)	177 (31.7)	
	계	126 (100.0)	109 (100.0)	141 (100.0)	117 (100.0)	66 (100.0)	559 (100.0)	

1) 청년층 15~29세, 중장년층 30~54세, 중고령층 55~64세, 2) 북한배우자비동거, 이혼, 별거, 사별 포함
* p<.05, ** p<.01 *** p<.001

정착기간에 따라 가구원수와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구원수는 증가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 이후 혼인과 자녀 출산 등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주 일관된 경향은 아니지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구소득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2.0%가 100만원 미만의 낮은 가구소득을 보여, 소득의 증가라는 긍정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표 6] 정착기간에 따른 가구 특성 비교

	가구원수(n=559)		가구소득(n=552)				계
	평균	표준편차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년 미만(a)	1.937	0.919	77 (62.1)	36 (29.0)	10 (8.1)	1 (0.8)	124 (100.0)
2~3년 미만(b)	2.229	1.042	55 (50.5)	45 (41.3)	7 (6.4)	2 (1.8)	109 (100.0)
3~5년 미만(c)	2.284	1.227	66 (47.8)	46 (33.3)	21 (15.2)	5 (3.6)	138 (100.0)
5~7년 미만(d)	2.248	1.041	60 (52.2)	37 (32.2)	16 (13.9)	2 (1.7)	115 (100.0)
7년 이상(e)	2.636	1.145	29 (43.9)	17 (25.8)	16 (24.2)	4 (6.1)	66 (100.0)
계	2.229	1.093	287 (52.0)	181 (32.8)	70 (12.7)	14 (2.5)	552 (100.0)
x^2/F (Scheffe 검증)	4.770*** a-c***		26.806**				

** p<.01 *** p<.001

(2) 정착지원 경험 비교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에 따른 정착지원 경험을 보면, 직업훈련 후 자격증, 직업훈련 장려금, 한국에서의 자격증, 취업장려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훈련 후 자격증 취득은 2년 미만의 초기 정착자를 제외한 경우,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직업훈련 후 자격증을 더 취득하였으며, 직업훈련 장려금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각종 자격증 취득 비율을 보면,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격증 취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제도가 2005년 이후 강화되고 직업훈련 후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장려금 혜택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의 직업훈련 및 장려금 경험이 적은 이유는 이들은 초기 정착자로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7.3%가 취업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정착기간 5년 미만인 경우 10.3~11.0%가 취업장려금을 받았지만, 이들에 비해 정착기간 5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려금을 받은 경험은 크게 낮았다.

직업훈련, 구직등록, 구직등록 후 일자리 알선, 지역사회지원 경험은 정착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직업훈련은 2년 미만의 초기 정착자들이

많이 받고 있으며, 구직등록과 지역사회지원은 정착기간이 짧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렇지만 구직등록 후 일자리 알선은 정착기간이 길수록 더 받은 경향을 보였다.

[표 7] 정착기간에 따른 정착지원제도 경험 비교

	직업훈련 (n=559)		직업훈련후자격증 (n=211)		직업훈련장려금 (n=559)		자격증 (n=55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년 미만(a)	0.405	0.493	0.431	0.500	0.270	0.446	0.270	0.446
2~3년 미만(b)	0.376	0.487	0.683	0.471	0.321	0.469	0.394	0.491
3~5년 미만(c)	0.340	0.476	0.479	0.505	0.220	0.416	0.397	0.491
5~7년 미만(d)	0.385	0.489	0.444	0.503	0.171	0.378	0.427	0.497
7년 이상(e)	0.394	0.492	0.269	0.452	0.167	0.376	0.470	0.503
계	0.377	0.485	0.474	0.501	0.234	0.424	0.383	0.487
F (Sheffe 검증)	0.329		3.129* b-e*		2.504*		2.544*	

	취업장려금 (n=559)		구직등록 (n=559)		구직등록후일자리알선 (n=127)		지역사회지원 (n=55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년 미만(a)	0.103	0.305	0.270	0.446	0.412	0.500	0.317	0.467
2~3년 미만(b)	0.110	0.314	0.257	0.439	0.500	0.509	0.294	0.458
3~5년 미만(c)	0.106	0.309	0.191	0.395	0.519	0.509	0.319	0.468
5~7년 미만(d)	0.009	0.092	0.248	0.434	0.621	0.494	0.205	0.406
7년 이상(e)	-	-	0.136	0.346	0.667	0.500	0.167	0.376
계	0.073	0.261	0.227	0.419	0.520	0.502	0.272	0.445
F	4.749***		1.569		0.888		2.394	

* p<.05, *** p<.001

(3) 경제적 적응 특성 비교

본 연구 분석대상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에서 15세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 고용율을 살펴보았다.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참여율 39.9%, 실업률 13.5%, 고용율 42.0%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5세 이상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1.0%, 실업률 3.7%, 고용율 58.7%이다. 남한사회에 전체적인 고용지표와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은 경제활동참여율은 21.1%, 고용율은 16.7%p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남한 전체의 실업률보다 4배 정도 높았으며(9.8%p),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청년실업률(15~29세, 8.1%)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착기간에 따른 추이를 보면, 남한사회 정착 4년 정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실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4~6년 사이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6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다시 경제활동참여율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다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을 살펴보았다. 15~64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여율은 48.3%(취업자 42.0%, 실업자 6.3%)로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보다는 높지만 남한 전체 경제활동참여율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15~64세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13.0%로 15세 이상의 실업률보다는 다소 낮지만, 남한 전체의 실업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정착기간 5년 정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5~6년 사이에는 크게 감소하여 6년을 넘어서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실업률은 4년까지는 감소하다가 4~5년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년 차에는 취업자의 비율은 상당 정도 줄어든 반면 실업자의 비율은 증가하여 실업률은 15.2%까지 증가하고, 5~6년차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취업자에서 이탈한 이들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지만 실업자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의 추이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만, 정착기간 4~6년차에 이르러서 취업자의 비율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 8] 정착기간과 경제활동상태

		계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7년 미만	7-8년 미만	8년 이상
15세 이상 (n=597)	경제활동 참여율	39.9	32.1	40.4	47.2	45.2	31.2	42.9	47.4	54.1
	실업률1)	13.5	19.2	13.2	10.6	15.2	17.2	12.5	10.0	0.0
	고용율2)	42.0	32.5	41.3	50.6	48.3	34.3	44.7	48.6	55.2
15~64세 (n=559)	경제활동 참여율	48.3	40.4	46.8	56.6	56.9	40.0	51.1	54.1	55.2
	취업자	42.0	32.5	41.3	50.6	48.3	34.3	44.7	48.7	55.2
	실업자	6.3	7.9	5.5	6.0	8.6	5.7	6.4	5.4	0.0
	비경제활동	51.7	59.6	53.2	43.4	43.1	60.0	48.9	45.9	44.8
	실업률1)	13.0	19.6	11.8	10.6	15.2	14.3	12.5	10.0	0.0

1) 실업률=실업자/(취업자+실업자)*100

2) 고용율=취업자/15~64세 인구*100

15~64세 인구의 정착기간에 따른 경제적 적응상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취업여부와 기초보장 상태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이어 취업자의 단시간 근로 여부, 근로소득, 미취업자의 한국에서의 소득활동 경험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상태와 기초보장은 남한사회 정착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¹²⁾ 취업자 비율을 보면, 5~7년 미만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기초보장 수급상태를 보면, 취업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5~7년 미만을 제외하고 정착기간이 길수록 취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정착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착기간에 따라 취업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과 미취업자의 소득활동 경험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정착기간 5~7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상태에 변화를 겪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 5>를 보면, 정착기간 5~7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기간에 따른 차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구주 배우자의 비율(18.8%)이 다소 높고, 수도권 거주자(41.0%)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정착기간 5~7년 사이

¹²⁾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남한사회 정착기간은 취업자 50.1개월(약 4.2년), 미취업자 45.4개월(약 3.8년)로 t-검증 결과(t=2.106) 취업여부에 따라 평균 정착기간은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수급상태에 따라 정착기간을 보면, 비수급자 49.6개월(약 4.1년), 수급자 45.2개월(약 3.8년)로 t-검증 결과(t=2.021) 수급상태에 따라 평균 정착기간은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있었다.

의 북한이탈주민은 가구주 배우자로 이들은 가구의 주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기초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경제적인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 높다. 그렇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취업자 비율이 다소 많고(수도권 42.9%, 비수도권 41.6%),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또한 다소 많은 특징을 보이거나(수도권 52.5%, 비수도권 5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수도권 거주자의 경제적 위험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리하면, 5~7년 사이의 거주자는 가구의 주소득원이 아니어서 미취업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한 후 5년을 전후하여 “적응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5년 정도까지는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시도와 노력으로 적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5년을 전후한 시기가 적응의 위기를 경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9] 정착기간에 따른 경제적 적응 비교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 (n=559)		기초보장 (n=559)		단시간 근로 (n=230)		근로소득 (n=229)		소득활동 경험 (n=324)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년 미만(a)	0.325	0.470	0.579	0.496	0.225	0.423	106.8	44.3	0.494	0.503
2~3년 미만(b)	0.413	0.495	0.560	0.499	0.186	0.394	120.7	112.6	0.563	0.500
3~5년 미만(c)	0.496	0.502	0.440	0.498	0.206	0.407	132.5	94.7	0.577	0.497
5~7년 미만(d)	0.385	0.489	0.547	0.500	0.222	0.420	122.8	118.1	0.667	0.475
7년 이상(e)	0.515	0.504	0.394	0.492	0.088	0.288	157.6	97.8	0.531	0.507
계	0.420	0.494	0.512	0.500	0.191	0.394	127.6	97.8	0.568	0.496
F	2.802*		2.647*		0.745		1.388		1.239	

* p<.05

3) 경제적 적응 영향요인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및 가구특성, 정착기간, 정착지원이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는 연령, 혼인상태, 가구 내 위치, 정착기간, 한국에

서 취득한 자격증, 지역사회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30~54세)과 비교하여 청년층(15~29세)은 미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청년층은 정규 교육을 받거나 취업준비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¹³⁾ 가구주에 비해 가구주 배우자의 미취업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가구주에 비해 그 배우자는 가구의 주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남한사회 정착기간을 보면, 정착 2년 미만에 비해 정착 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가능성이 높지만, 3~5년 정착자와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훈련과 관련 지원은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사회에서 자격증은 기술의 향상을 의미하여 학력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적자본의 신호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직업훈련의 효과가 없는 반면 한국 자격증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향상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북한이탈주민은 IT관련(컴퓨터 기초, 오피스 프로그램 및 정보통신 설비 등)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이는 기초기술 습득으로 취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지식 습득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받는 공업기술(용접, 중장비, 자동차 정비, 도배 등), 요리와 미용기술 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또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취업으로 직접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은 기초기술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적 기술 습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 수준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장려금은 취업과 긍정적 관계, 즉 취업장려금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취업장려금이 취업을 지속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선후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취업 지속과 긍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장려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지원 경험

13) 청년층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을 보면, 정규교육(입시학원, 진학준비 포함) 64.4%, 육아나 가사 12.7%, 구직활동 혹은 취업준비 101.% 등으로 나타났다.

14) 본 연구자료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횟수를 보면 1회 81.6%, 2회 16.1%, 3회 이상 2.3%로 대부분이 1회의 직업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미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는 미취업자들이 지역사회지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0] 경제적 적응 영향요인 1

		전체(n=553)					
		취업			기초보장수급		
		B	S.E.	Exp(B)	B	S.E.	Exp(B)
남성(기준: 여성)		0.262	0.255	1.299	-0.064	0.257	0.938
연령(기준: 중장년층)	청년층	-0.795*	0.310	0.452	0.222	0.319	1.249
	중고령층	0.098	0.536	1.103	1.509*	0.620	4.524
남한학력(기준:고등)	없음	1.136	0.666	3.116	-0.232	0.578	0.793
	중등	-19.047	8615.878	0.000	-0.852	0.617	0.427
	대학	1.232	0.661	3.427	0.118	0.570	1.126
혼인상태(기준: 유배우)	미혼	-0.444	0.313	0.642	0.420	0.335	1.522
	무배우	-1.194***	0.279	0.303	1.205***	0.306	3.338
가구 내 위치(기준: 가구주)	가구주배우자	-0.890**	0.342	0.410	-0.079	0.362	0.924
	기타	-0.273	0.454	0.761	-0.323	0.466	0.724
정착기간(기간: 2년 미만)	2~3년	0.301	0.318	1.351	0.222	0.325	1.248
	3~5년	0.596*	0.298	1.816	-0.408	0.307	0.665
	5~7년	0.070	0.316	1.072	0.030	0.322	1.031
	7년 이상	0.444	0.386	1.560	-0.525	0.394	0.591
수도권(기준: 비수도권)		0.150	0.218	1.162	0.209	0.226	1.233
직업훈련(기준: 없음)	직업훈련만	-0.246	0.310	0.782	-0.612	0.327	0.542
	직업훈련+자격증	0.114	0.440	1.121	-1.043*	0.489	0.353
직업훈련장려금(기준: 없음)		-0.466	0.363	0.628	0.957*	0.391	2.604
한국자격증(기준: 없음)		0.811**	0.265	2.250	-0.232	0.283	0.793
취업장려금(기준: 없음)		2.392***	0.482	10.938	-1.385**	0.521	0.250
구직지원(기준: 없음)	구직등록만	-0.163	0.342	0.849	-0.171	0.362	0.843
	등록+일자리알선	-0.190	0.313	0.827	-0.307	0.331	0.735
지역사회지원(기준: 없음)		-0.739***	0.237	0.478	0.636**	0.243	1.889
취업상태(기준: 미취업)		-	-	-	-1.880***	0.228	0.153
상수		-0.993	0.739	0.370	0.653	0.663	1.921
-2LL		603.846			583.562		
Nagelerke R^2		0.318			0.375		

* p<.05, ** p<.01 *** p <.001

북한이탈주민의 기초보장수급과는 연령, 혼인상태, 직업훈련, 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 지역사회지원, 취업상태와 관계가 있었다. 중장년층(30~54세)에 비해 중고령층(54~64세)이 기초보장 수급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유배우자

에 비해 무배우자의 수급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는 무배우자는 이차적 취업가구원이 없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정착지원제도 중 직업훈련은 미취업자일 가능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에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개인들이 취업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보다는 남한사회 취업이 어려운 계층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은 취업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취업장려금과 기초보장 수급과 부정적 관계가 있는데 이는 예상된 결과이다. 즉 4대 보험 상근 직업에 취업을 통한 소득의 획득은 기초보장 수급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은 기초보장 수급과 긍정적 관계가 있어,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취업 능력이 낮고, 다양한 복지욕구가 있는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취업자의 근로시간에는 혼인상태, 직업훈련만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에 비해 무배우자가 단시간근로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직업훈련 경험만 있는 경우에 비해 직업훈련 후 자격증 취득은 단시간 근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근로소득은 성, 연령, 남한학력,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근로시간이 관계가 있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근로소득 많은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예측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30~54세)에 비해 중고령자(55~64세)의 근로소득이 적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남한학력이 없는 개인과 대학 학력자의 근로소득은 많았다. 이는 높은 학력은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남한학력이 없는 정착자의 소득이 고등 학력자에 비해 높은 것은 남한학력이 없는 개인들은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기술수준만으로 취업이 가능해 굳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착지원 제도 중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시간이 긴 경우 근로소득은 증가하였다.

미취업자의 남한에서 소득활동 경험을 보면, 학력, 정착기간, 한국자격증, 구직지원, 지역사회지원과 관계가 있었다. 고등 학력자에 비해 남한 학력이 없는 개인과 대학 학력자의 소득활동 경험이 많았으며, 2년 미만의 정착자에 비해 5~7년 정착자의 소득활동 경험이 더 많았다. 정착지원 중에서는 한국에서 자격증 취득과 구직활동 후 일자

리 알선서비스는 소득활동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지역사회지원 서비스는 소득 활동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지원 서비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좀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더 많이 이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표 11] 경제적 적응 영향요인 2

		취업자 (n=229)						미취업자 (n=320)		
		단시간근로			로그근로소득			소득활동경험		
		B	S.E.	Exp(B)	B	S.E.	t	B	S.E.	Exp(B)
남성(기준: 여성)		-0.454	0.508	0.635	0.204	0.083	2.469*	-0.179	0.367	0.836
연령(기준: 중장년층)	청년층	0.492	0.645	1.636	0.068	0.112	0.604	0.239	0.391	1.270
	중고령층	1.326	0.930	3.765	-0.359	0.170	-2.113*	0.384	0.735	1.469
남한학력(기준: 고등)	없음	-3.166	1.786	0.042	1.021	0.283	3.601***	2.642***	0.815	14.038
	중고등 대학	-	-	-	-	-	-	-1.047	1.210	0.351
혼인상태(기준: 유배우)	미혼	0.611	0.673	1.843	-0.138	0.100	-1.385	0.168	0.479	1.183
	무배우	1.368*	0.562	3.927	-0.054	0.092	-0.587	0.368	0.415	1.444
가구내위치(기준: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0.673	0.711	1.961	0.101	0.116	0.875	-0.295	0.469	0.745
	기타	0.545	0.849	1.725	0.039	0.167	0.231	0.087	0.592	1.091
정착기간(기간: 2년 미만)	2~3년	-1.038	0.690	0.354	-0.024	0.115	-0.208	0.412	0.406	1.510
	3~5년	-0.567	0.606	0.567	-0.053	0.104	-0.512	0.491	0.383	1.634
	5~7년	-0.408	0.644	0.665	-0.100	0.115	-0.870	0.805*	0.406	2.236
	7년 이상	-1.493	0.853	0.225	0.015	0.132	0.117	0.591	0.514	1.806
수도권(기준: 비수도권)		-0.578	0.458	0.561	-0.029	0.075	-0.385	0.029	0.295	1.030
직업훈련(기준: 없음)	직업훈련만	-1.204	0.771	0.300	0.046	0.116	0.392	0.102	0.391	1.107
	직업훈련+ 자격증	-2.118*	1.055	0.120	-0.010	0.137	-0.074	-0.627	0.682	0.534
직업훈련장려금(기준: 없음)		1.669	0.915	5.307	-0.207	0.125	-1.650	0.289	0.488	1.335
한국자격증(기준: 없음)		-0.501	0.537	0.606	0.206	0.089	2.328*	0.723*	0.424	2.061
취업장려금(기준: 없음)		-1.570	0.837	0.208	0.033	0.103	0.323	1.335	1.158	3.801
구직지원(기준: 없음)	구직등록만	-2.000	1.159	0.135	0.189	0.110	1.710	0.561	0.480	1.752
	등록+ 일자리알선	-0.053	0.666	0.948	0.104	0.108	0.961	1.476**	0.528	4.374
지역사회지원(기준: 없음)		-0.467	0.593	0.627	-0.119	0.088	-1.356	-0.519*	0.286	0.595
단시간근로(기준: 비단시간근로)		-	-	-	-1.176	0.092	-12.722***	-	-	-
상수		2.437	1.969	11.442	3.753	0.318	11.790***	-2.813**	0.913	0.060
-2LL/F Nagelerke R^2/R^2		174.027 0.314			13.698*** 0.779			346.300 0.333		

* p<.05, ** p<.01 *** p <.001

4. 결과 논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정착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착지원제도가 과연 이들의 경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직업훈련과 직업훈련 장려금은 취업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과, 특히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효과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이 연결되었을 때 미약하나마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서 직업훈련이 취업이나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김화순 외(2010)의 연구 결과나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증 취득 장려금이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김선화(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보다는 자격증 취득이 오히려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이 자격증으로 이어졌을 때 탈빈곤이나 단시간 근무여건에서 탈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 자체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에 유의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직업훈련이 자격증 취득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의 내용은 단순(또는 기초)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넘어선 경쟁력 있는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취업장려금은 취업과 수급 탈피, 근로소득, 소득활동 경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장려금 수령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고용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취업장려금과 취업, 탈수급 간의 관계는 인과적 관계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근근무가 소득에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취업유지와 근무시간이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유지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하는 취업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선화(2011)의 연구에서 취업장려금만이 취업기간과 취업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 김화순 외(2010)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변인은 직업기간이라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화순 외(2010)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소득에 대학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긍정적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반해, 취업기간과 근무지의 규모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용한 직업훈련의 질과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나 자격증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에서 위치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한정착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의 가능성은 다소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취업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기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기간 3~4년차까지는 취업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어드는 특성을 보이지만, 5-6년차에는 취업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실업률도 줄지만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취업에서 이탈한 개인들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지만, 이 시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실업자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적응초기 다양한 지원과 스스로의 적응노력으로 노동시장에 일단 진입하고 노동활동을 시작하지만, 사회진출 5~6년차는 한국사회 “적응 위기”를 경험하고, 일부는 아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개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서도 발견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상당수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3년 이내에 자활사업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5-6년 정착기간이후에 경제적 적응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 참여로 이행하는 것을 돕는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유자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취업으로 이행하려면 직업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의 강화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보육지원,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직등록과 일자리 알선과 같은 구직지원제도는 미취업자의 소득활동 경험에만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취업, 기초보장, 근로시간, 근로소득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직지원제도가 단시간 근로, 취업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하는 고용이 되도록 알선하는 직업들의 질과 안정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한 후에 그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의 패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취업기간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들은 직업훈련을 거치기보다는 정착 초기부터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거나 노동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들이 직업훈련 과정을 남한 사회에 적응의 시간으로 활용해서 점진적인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고 취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정착지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이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현재 취업의 질과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기회를 얻게 되는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고용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의 수준에 맞는 취업기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서비스(예로, job coaching)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유지와 탈수급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인적자본과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의 진로지도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고용지원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여야 할 것으로는 표본을 편의 표집을 통해 추출하였다는 점과 2차적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분석에 투입할 수 있는 변인에 제약(예로, 건강, 북한 학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투자가 실제 이들의 경제적응-취업, 소득, 탈수급 등에 과연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내용과 집행방식에 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 사회학. 45(1), 191-227.
- 고혜원 (2008). 새터민의 직업훈련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865-880.
- 김선화 (201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연구: 정착장려금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연희·조영아·유시은 (2009).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 연구: 남한 빈곤층과의 비교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1(1), 195-218.
- 김연희·백화영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경제적응을 중심으로. 통일부.
- 김주섭·박진화·이지은 (2006). 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의 실태와 과제: 자활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화순·유길상 (2010).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남북인적자본의 영향 연구: 북한이탈주민 집단 370명의 진로추적 사례를 중심으로.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지역, 년, 월, 일). 97-129.
-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박상인·김태종 (2005). 생계비 보조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박성재·김화순 (2008).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71-96.
- 북한인권 정보센터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북한인권 정보센터.
- 오봉욱·최종복·권혁철 (2008).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조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입대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5, 105-127.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오영훈 (2005). 자활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4(3), 317-341.
- 오영훈 (2006).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9(2), 1-28.
- 유시은 (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 요인 분석: 7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2001~2007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윤덕룡 (2007). 경제적 적응상황분석과 대책.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웰컴 두 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467-491.
-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65-96.
- 이기영 (2006). 북한이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18(1), 179-216.

전재식 (2008). 비경제활동-고용이행에 있어서 직업훈련 참여 효과. *직업능력개발연구*, 11(3), 1-22.

채창균·김미란 (2004).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 및 고용효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hiswick, B., Y. Lee, and P. Miller (2003). Patterns of immigrant occupational attainment in a longitudinal survey. *International Migration* 41(4), 47-69.

Ferrie, J. and A. Ferrie (1996). A new sample of males linked from the public use microdata sample of the 1850 US federal census of population to the 1860 US federal census. *History Methods* 29(1), 41-156.

Gold, S. (1992). The employment potential of refugee entrepreneurship: Soviet Jews and Vietnamese in California. *Policy Studies Review* 11(2), 176-186.

Hum, D. and W. Simpson (2005). Economic assimilation of Canadian immigrants: Cross-sectional vs. panel data estimates. Research report to Prairie Center of Excellence for Research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Mincer, J. (1995). Economic development, growth of human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he wage structure. *Journal of Economic Growth* 1, 29-48.

Potocky-Tripodi, M. (2004).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immigrant and refugee economic adapta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view* 13(1), 59-91.

Rooth, D. and J. Ekberg (2006). Occupational mobility for immigrants in Sweden. *International Migration* 44(2), 57-77.

Slack, T. (2007). Underemployment across immigrant gener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36(4), 1415-1430.

Yoon, In-jin (1997).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outcomes of the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economic adjustment

Kim, Yeun-hee* & Baek, Ha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social interventions that aim to promote self-sufficiency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new Resettlement Assistance Act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s augmented social intervention component and financial incentives that are devised to strengthen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capital. Those include educational services such as fre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job preparation & job placement services, and the financial reward system with a reward for completion of vocational training, obtaining job related licences and maintaining job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vocational training did not exert any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but acquisition of a vocational license does contribute to employment and income level. An incentive for job retention has a close relation with employment and getting off the welfare system but no association with income level. Higher education in Korea did not seem to lead to an employment or a higher income. It needs to be explored in the future research whether the result is such because the years in education prevented those in school from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or investment in education does not contribute to employability of the participants.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yeunheekim@daegu.ac.k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hywhite@paran.com)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djustment, Resettlement Assistance
Act for North Korean defectors

◆ 2011.11.02. 접수 / 2011.11.28. 1차 수정 / 2011.12.06. 게재 확정